

# 기रो에 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위기, 일자리 · 성장, 경제민주화의 해법 －

- 일시 : 2012년 11월 21일 (수) 15:00 – 17: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회의실
- 주최 : 여의도연구소 (새누리당)



## || 토론회 개최 배경 ||

유럽은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미국도 재정 절벽(fiscal cliff)으로 재정 긴축이 불가피하고, 성장 엔진인 중국도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의 장기 동반 침체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이 상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내재적 취약성이 증폭되면서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내외외환 (內憂外患)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자리 · 성장, 복지와 경제민주화 ...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여의도연구소에서 전문가와 각 계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2년 11월 21일 (수) 15:00 - 17: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회의실
- 좌장 :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
- 발제 : 안국신 (중앙대 총장)
- 토론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여의도연구소장 / 국회의원 김공림



# || 목 차 ||

## ■ 순서

■ 좌장 :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

■ 발제 : 안국신 (중앙대 총장)

## ■ 토론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 『기로에 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위기, 일자리 · 성장, 경제민주화의 해법 -

##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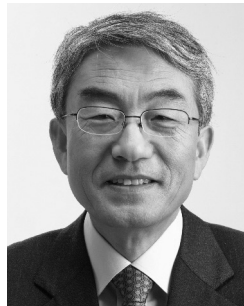
개회식	국민의례	15 : 00	
	내빈소개	15 : 05	사회자 (홍지만 의원)
	인사	15 : 15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
	축사	15 : 20	이한구 원내대표
			김무성 총괄 선대본부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사회자 : 홍지만 국회의원			
토론회	발제	15 : 30	안국신 (중앙대 총장)
	토론	16 : 00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17 : 00	질의 & 응답	
	17 : 30	폐회	
※ 좌장 :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			





# 『기로에 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위기, 일자리 · 성장, 경제민주화의 해법 -

❖ 좌 장 ❖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

## [ 학 력 ]

1984년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경제학 박사)  
1975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 [ 경 력 ]

2011년 -                      성균관대학교 총장  
2007년 - 2011년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부총장  
2003년 - 2006년              성균관대학교 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  
2001년                      한국재정학회 회장







# 기रो에 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볼 것인가?

안국신 (중앙대 총장)

## I. 머리말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버금가는 충격을 세계경제에 주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한다. 이렇게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4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에 가장 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이 ‘대불황’을 극복하고 2008년 이전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는 적어도 3-4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레인하트와 로고프의 연구에 따르면 금융위기로부터 회복이 나타나기까지는 평균 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세계경제가 불황국면이 지속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소국경제인 한국경제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강의 기적이 끝났고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경고도 흔하게 들린다. 극적으로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볼 때 이런 지적과 경고가 나올 만도 하다. 1960-1996년 기간 중 연평균 8.0%의 고속성장을 기록했던 우리 경제는 1997-2010년 기간 중 4.1%로 내려앉았다. 참여정부 기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3%였는데 MB정부 기간 중 3.0%일 것으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도 근래에 3-4%대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세계경제의 위기에 따른 수출환경의 악화와 가계부채 부실 심화, 부동산경기침체 등이 겹쳐 순환적 침체까지 가세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2-3%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최근 OECD는 한국경제가 2011-2030년 기간 중 연평균 2.7%, 2011-2060년 기간중에는 1.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11-2060년 기간 중에 전망되는 세계경제의 연평균 성장률 3.0%보다 훨씬 낮은 성장세다. 한국경제는 이제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저성장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에는 고용, 임금, 소득, 소비, 투자, 자산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익숙해진다. 저성장시대에는 예전과 다른 저기대(低期待)로 적응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국민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 더욱이 고도성장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소득을 축적했던 친민자본주의 행태와 관치경제가 만연했던 데 대한 반사작용으로 일반국민의 불평등에 대한 용인도가 낮고 복지 요구가 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성장, 분배, 복지, 경제민주화 등을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보수진영’은 지속가능한 분배와 복지를 위해서라도 경제성장이 우선되어야 하고 개념이 종잡을 수 없는 경제민주화에 집착하는 것은 성장을 저해한다고 본다. ‘진보진영’은 분배와 복지, 경제민주화가 경제성장보다 훨씬 중요한 목표이자 가치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분배와 복지, 경

제민주화가 이루어지면 건설한 내포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각자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기의 관점을 독선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열적인 상황은 극복되어야 한다. 본 발제문의 메시지는 역지사지와 중용을 강조한 선현들의 예지와 경제학의 지혜를 활용하여 분열적인 상황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 II.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점과 대응전략에 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여기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주제들을 다루기 위한 출발점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크게 1) 개방소국경제로서의 변동성 확대 2) 경제의 노쇠화 경향 3) 경제사회의 이중구조화(혹은 ‘양극화’) 4) 중국의 G2화와 북한변수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개방소국경제로서의 변동성 확대는 높은 대외의존도와 외환, 금융시장의 지나친 변동성을 말한다. 이로 인해 여차하면 해외부문에서 생긴 충격이 우리나라 외환, 금융시장의 불안과 위기로 변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의 노쇠화 경향은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 고령화, 좋은 일자리 창출 저조와 청년실업 문제, 높은 가계부채와 공공부채, 낮은 가계저축률, 높은 요소비용 등을 말한다. 이런 노쇠화 경향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

양극화는 소득·자산 분배의 불균등 심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나친 격차 등을 뜻한다. 양극화는 사회갈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도를 낮추며 ‘과다한’ 복지 요구를 낳고 OECD 최고의 자살률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의 G2화와 북한변수는 global imbalance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패권주의가 강화되고 비정상국가 북한이 존재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과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1) 건설한 거시안정화정책 2) R&D와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정책 3) 공정한 사회와 동반성장의 추구 4) 나이(J. Nye) 교수가 주장하는 Smart Power 지향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건설한 거시안정화정책은 금융의 건전성 감독 강화, 적정 자본규제, 고용친화형 경제정책, 부동산가격 안정을 포함한 물가안정,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포함한다. R&D와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정책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발현할 수 있는 것이 R&D와 혁신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인력, 기술투자를 확대하며 산학연관의 R&D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교육개혁을 이루며 좋은 사회하부구조를 갖추는 것을 포괄한다. 공정한 사회와 동반성장의 추구는 사회안전망 확충, 빈곤층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상생과 배려의 공동체주의 함

양 등을 포함한다.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써야 할까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자세한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혹자는 우리 경제가 현재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제활성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경제활성화정책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득보다 실이 많다. 우선 현재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는다면 경제가 위기상황이라 할 것이다. 개방소국경제이고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세계경제가 대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만 지금보다 훨씬 잘 풀리게 하는 비방은 없다. 그런 비방이 있다면 경제 살리기와 747을 표방한 MB 정부가 벌써 썼을 것이다. 정부가 1990년대 일본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재정건선성을 훼손하는 경제활성화정책을 자제하고 건설한 거시안정화정책을 지향하는 것은 잘 하는 일이다.

### III. 경제성장과 고용

저성장은 고용, 분배, 복지에 악영향을 미친다. 저성장기에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불안이 커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사회 안정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도 적정성장이 필요하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성장률을 4%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성장이 예전처럼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 주던 시대는 지났다. 이를 인정하면서 성장과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시각 중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성장의 고용창출효과가 작아졌지만 그래도 성장은 좋은 일자리의 원천으로서 중요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고용친화형 성장>에 힘써야 한다. R&D 투자 확대, 규제완화, 과감한 보육 지원을 통한 여성노동참여율 제고, 새로운 성장동력원 창출(보건의료, 관광, 문화, 교육, 법률 등의 서비스시장 규제완화 및 지원육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좋은 사회하부구조를 갖추는 것이 기업이 주도하는 고용친화형 성장을 촉진한다.

둘째,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공공부문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분야와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어느 정도까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 경기침체가 심각해지면 정부가 재정을 더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정책도 단기에 필요하다. 동시에 독일,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바와 같은 실업자들, 특히 미취업 청년들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유력한 단기 고용정책이 될 수 있다.

단, 첫째에서 말한 기업이 주도하는 고용친화형 성장이 주가 되고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부차적이어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이 나쁘고 가급적 없애야 한다는 일반국민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스마트 워크 시대에 맞게 광범위한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규직의 2/3 수준인 임금격차를 현저히 줄이는 데에 합심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주40시간 노동에 12시간까지 연장노동을 허용하는 법규를 준수하여 한편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특히 앞의 첫째와 셋째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전투적인 대기업 노조 때문에 대기업의 임금이 우리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높고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크게 함으로써 좋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III. 경제성장과 분배 복지

경제성장이 중요한가, 분배 복지가 중요한가는 우리나라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을 구분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보수진영은 경제성장이 분배 복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성장은 고용과 분배 복지에 악영향을 미친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성장이 높을수록 좋다. 성장잠재력을 시현하고 나아가 확충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보진영에서는 분배와 복지가 성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분배와 복지가 열악하면 사회갈등이 커져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 양호한 분배와 복지가 성장을 촉진한다.

실용적인 접근은 성장도 중요하고 분배와 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장이 중요하지만 성장을 앞세울 때 분배와 복지가 소홀해진다. 개발시대에 추구해 온 성장일변도정책의 폐해를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분배와 복지가 성장을 촉진하는 정성적 효과는 있지만 (분배와 복지가 아주 열악한 경우라면 몰라도) 분배와 복지가 성장을 촉진하는 정량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분배에 관한 인식의 편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진보진영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태가 예전에 비해 아주 나빠졌고 정부가 나빠진 분배를 예전처럼 좋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그 이후의 소득분배상태가 나빠진 것은 맞다. 그러나 최근의 소득분배상태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은 상태이다.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상태가 크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분배정책은 소득분배상태를 개선시키지만 1997년 이전 상태로 돌아갈 만큼 개선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세계화와 기술진보, 그리고 가구구조의 변화(1인가구와 여성가장가구의 증가 추세) 등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소득재분배보다 빈곤퇴치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

복지에 관해 진보적인 관점과 보수적인 관점이 너무 달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진보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 복지후진국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대로 20% 안팎인 서구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 시절의 서구선진국에 비해 보아도 현저히 낮다. 따라서 복지를 대폭 확충할 여력과 필요



가 있다. 복지를 대폭 확충하여 복지후진국에서 탈피해야 한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복지지출구조로도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20-40년 만에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복지의 멍에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까지 포함한 7,000여만 명의 복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력에 맞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남유럽국가처럼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어느 쪽 입장이 옳은가? 양쪽의 입장을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기와 장기라는 관점으로 수용하면 다 옳다. 보수적인 입장은 장기적인 상황과 가능성을 묘사하고 있다. 진보적인 입장은 단기적인 상황, 지금 당장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인과 중산층 이하의 국민은 장기보다 단기에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발전단계에 비추어 볼 때 복지후진국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앞서 간 서구선진국의 발전단계와 비교해 볼 때 복지후진국이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 경제력에 비해 복지가 후진적이었던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일견 과도한 복지수요가 분출할 만도 하다. 분출하는 복지수요를 적극 수용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 나가자. 이렇게 기득권층과 보수진영이 포용적인 시각을 가지고 복지를 대폭 확충하는 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재원은 정부지출의 효율화와 조세감면 축소로는 부족하다. 궁극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사회보장부담금과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크게 낮다.

보수진영이 단기에 복지를 우리 경제력에 맞게 대폭 확충하는 데에 미온적이고 “저출산, 고령화로 현 기조를 유지해도 머지않아 사회복지지출이 너무 높아진다”고 말하는 것은 진보진영과 못 가진 계층에게는 “1년 후에 굶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밥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억지논리로 들리게 마련이다. 경제학이 강조하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면서 양쪽에 맞는 장단기 정책을 설계하고 조화시키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보수진영이 진보진영 못지않게 복지의 대폭 확충에 적극 나서되 복지를 확충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보적인 입장의 무모함을 지적하고 선별복지(맞춤형 복지, 스마트 복지)를 주장해야 논리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고소득층까지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노령연금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하지도 않는 나쁜 정책이다.” “일련의 무상복지와 보편복지가 장기에는 우리나라를 남유럽처럼 망가뜨릴 수 있다.” “빈곤퇴치와 기업이 주도하는 고용친화형 성장이 진정한 복지다.”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보편복지와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선별복지 중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주류경제학계에서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부자 노인에게 노령연금을 주고, 고소득층 아동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부유층 자녀에게 ‘반값등록금’ 혜택을 주는 것은 난센스이다.

주류경제학자가 아닌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돌아보자. 다산은 복지제도에서 자립과 자조(self-help)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국가가 백성의 삶을 책임져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스스로의 근로능력, 부양가족, 또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았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 생산적 복지를 일찍이 다산이 주장한 것이다.

다산의 권분 사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민심서 진황6조 권분(勸分)은 지역사회에서 서로를 보살피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권분의 원래 의미는 ‘흉년이 들었을 때 부유한 사람들에게 권장해 절량 농민을 구제하기 위한 곡식이나 재물을 내놓거나 직접 나눠주도록 하는 일’을 뜻한다.

**“옛날에는 백성에게 목인임홀(睦嫻任恤)을 가르쳤으며,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형벌로 다스렸다. 흉년에 곡식을 나누어 먹도록 권한다면 백성으로서 어찌 나누어 먹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형제에게 나누어 주고, 인척에게 나누어 주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왕명을 받드는 것이요, 그 재물을 관가에 바쳐서 만민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다.”(목민심서, 진황6조, 권분)**

재해가 있을 때 가진 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이 선진국에 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빈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애덤 스미스는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가 되어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상상력을 가지는 것이 시민사회 구성원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이 이런 공감의 상상력을 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행하는 경우가 드물다. 다산과 스미스가 강조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수진영이 힘써 행하고, 다산이 통찰한 선택적 복지를 진보진영이 수용하는 것이 국민화합을 이루는 사회적 대타협이다.

#### IV. 양극화와 경제민주화

정치권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대해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혼란스럽고 정치권이 지나치게 포퓰리즘에 휩쓸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맞는 얘기이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화두가 된 시대적 배경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영미식 자유시장경제를 택해 왔다. 성장전략은 대기업과 수출이 주도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이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역동적 발전을 가져 온 한편으로 복지가 소외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나자 국가가 개인의 삶의 풍요와 사회정의를 위해 적극 개입하는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영미식 자유시장경제에 경도되어 공정과 상생이 깨진 만큼 이런 쓸림을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반대 잣힘을 통해 중용과 균형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제 수출 뿐 아니라 내수도 중시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성장하는 것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고 양극화는 해소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이를 정치권이 이슈화한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여러모로 정의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정의해 본다. <경제민주화란 사회구성원들의 능력과 노력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1) 소득과 부의 분배 면에서의 불평등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평등한 관계 3)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대우 등을 뜻할 수 있다. 경제학 교과서에 경제민주화란 개념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학 교과서에서 묵시적으로 제시하는 바람직한 소득분배는 한계생산력이론이다. 이 이론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크다면 시장의 실패이고, 지나친 소득분배의 불균등 같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다.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 소유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생산요소의 마지막 단위가 생산에 기여한 몫만큼 받는다는 것이 한계생산력이론이다. 경영자와 피고용자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것을 한계생산력이론으로 합리화하기 힘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큰 실적 격차도 양자가 원청-하청 관계이면서 일방적인 납품가 후려치기로 생긴다면 이것도 한계생산력이론으로 합리화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생산물시장에서 독과점으로 군림하는 대기업(재벌)의 시장지배적 행위와 불공정행위는 법으로 엄정하게 규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서 그동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피고용자 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도 교과서적인 소득분배이론으로 합리화시키기 어려울 만큼 큰 면이 있다. 대기업 노조의 영향력이 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등한 세력 분포와 이에 따른 불균등한 소득분배는 부당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부의 분포도 정경유착, 기득권층의 불법, 편법 상속 등으로 크게 불균등해졌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이런 이중구조화 내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을 정치권이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으로 대변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의 선호를 중시한다는 개념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책의 소비자인 국민의 선호도 중시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민주화는 앞에서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든 양극화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개선되게 하는 시대적 담론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긍정하면서 자유시장경제의 폐해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여 시장경제의 장점을 잘 살리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조상의 지혜를 본받아 경제민주화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지나치게 일탈하지 않게 중용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양극화를 완화, 개선시킬 수 있고 완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양극화를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 V. 맺음말 : 새 정부의 과제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이다. 인구가 5,000만 명을 넘고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세계 7대국(G7)이다. 무역 1조 달러의 세계 10대 무역대국이다. 2차대전 이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공여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국가이다. 정치적으로도 주요20개국(G20)의 일원이다. 문화적으로도 K 팝 등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는 강소국이다.

자랑스러운 국가 위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은 행복하지 못하다. 지금까지 대기업과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고수해 온 결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공정과 상생의 풍토와는 멀어져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배와 복지, 경제민주화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분출하는 분배와 복지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버거운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경제학계와 나아가 지성인들이 ‘설교자’로서 보수적인 이념과 자유시장경제의 장점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관찰자’로서 사회적 약자에 공감하고 상생 화합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본 발제문의 문제의식이다. 분배와 복지, 경제민주화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것들이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 큰 정치이자 오늘의 시대정신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개선하는 데에 경제학의 지혜와 선현들의 예지를 활용하였다. 경제학의 지혜는 소비자주권과 기회비용의 개념이고 단기와 장기의 구분이다. 통섭과 융합의 시대인 오늘날 일찍이 18세기에 통섭과 융합의 대가였던 애덤 스미스와 다산 정약용이 공감적 상상력과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한 것을 배워야 한다. 특히 이기심과 보이지 않는 손이 자유시장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본 스미스가 도덕적 감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경제학계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감성의 덕목이 중요해지고 있다. 관용과 배려, 배품과 나눔, 동반성장의 명제를 감성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지만 OECD 제1의 자살률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지나친 양극화를 상징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새 정부가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일만 해내더라도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와 국민화합이라는 말이 공허하지 않을 것이다. 기득권층과 보수진영이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증세와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관대해지도록 이끄는 것이 새 시대의 리더십이다. 이런 리더십이 있을 때 보편복지는 실현가능하지 않은 나쁜 정책이라는 것을 국민에 설득하는 도덕적 권위가 생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노동시장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따뜻한 시장경제와 통합의 공동체주의를 표방하며 사회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새 정부가 이런 리더십을 갖추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 참고문헌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 1759, 박세일 · 민경국 공역, 2010, 비봉출판사  
최병선 · 심준섭 편, 『다산의 행정사상』, 대영문화사, 2010.

C. Reinhart and K. Rogoff, *This time Is Differ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 ( 해외경제 여건 )

- ① (세계경제) 금년 들어 세계경제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장기화 등의 영향이 신흥국으로 확산되면서 **성장세가 약화**
- 향후 주요국의 정책대응 강화, 금융불안 완화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되겠으나 **회복속도는 완만**할 전망
- ② (미 국) 재정긴축(fiscal cliff)을 둘러싼 불확실성, 고용의 더딘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강화 효과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금융여건 호전, 주택경기 개선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재정건전화, 고용의 본격적인 개선 지연 등이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③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로 인한 경제주체의 신뢰 저하, 은행의 디레버리징, 재정긴축 등이 맞물리면서 **경기침체에 직면**
-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OMT) 등으로 경제주체의 심리가 다소 회복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겠지만**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잠재**
- ④ (일 본) 해외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저조,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둔화세를 지속**
- 대지진 복구를 위한 재건사업이 마무리되고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도 종료(2012.9.21일)됨에 따라 **낮은 성장**에 머물 전망
- ⑤ (신흥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의 경우 수출부진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계속 둔화**
- 향후 대외여건의 점진적 개선, 경기부양책 효과 가시화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 ( 현 경제상황 판단 및 전망 )

### ① (성 장) 최근 들어 경기 둔화가 주춤하는 모습

- 파업, 태풍 등 일시적인 경기부진 요인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9월중 생산, 소비 및 투자가 전월대비 플러스(+)로 전환
- 수출도 신흥시장국으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9월중 감소폭이 축소되고 10월에는 증가로 전환
- 향후 국내 경기는 주요 선진국의 추가 양적완화, 중국의 경기부양책 실시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완만하나마 개선 흐름**을 보일 가능성
- 성장경로의 상·하방 리스크에 있어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 미국 fiscal cliff 등 **하방 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

### ② (물 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 둔화, 국내 석유류가격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수준을 지속**

- 무상보육·급식의 영향을 제거한 물가 상승률도 물가목표 중심치를 하회하는 2.7% 수준
- 금년 연말까지는 공공요금, 서비스요금 등의 안정으로 물가 오름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국제유가 안정, 수요압력 완화 등으로 **오름폭이 크지 않을 전망**
- 다만 향후 물가경로에는 농산물 및 국제곡물가격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잠재**

### ③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경기가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상품수지**는 수출·수입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로 전환**되고 **흑자가 지속될** 전망
- **서비스수지**의 경우 건설서비스 수입이 해외건설 수주 활력 저하로 미약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환율 하락 등으로 해외여행 지출은 늘어남에 따라 **흑자폭이 점차 축소**될 가능성



④ (전 망) 향후 우리 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는 안정된** 모습을 보일 전망

- 경제성장률(전기대비)이 내년 상반기까지 **매분기 1%에 미치지 못하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2000.1/4 ~ 08.2/4분기 평균 성장률: 1.2%)
  - 선진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주요국의 부채 감축,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당분간 **위기 전 활력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더딘 성장세로 인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물가 오름세도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
-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겠지만 흑자규모가 줄어들면서 **점차 균형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12.上	下	연간	2013
▪GDP 성장률	2.5 [2.7]	2.2 [3.2]	2.4 [3.0]	3.2 [3.8]
▪CPI 상승률	2.7 [2.7]	1.9 [2.6]	2.3 [2.7]	2.7 [2.9]
▪경상수지(억달러)	138 [135]	202 [65]	340[200]	250[180]

주: [ ] 내는 2012.7월 한국은행 전망 기준

## II

### 국내외 거시경제 위험요인 점검

◆ 우리 경제는 당분간 **대외요인이 경기 향방을 좌우**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고용창출능력 저하, 기업의 투자활력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① **(Fiscal Cliff)** 최근 오바마 대통령 재선 성공 이후 미국에서는 급격한 재정긴축(fiscal cliff) 가능성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

○ 美 의회예산처(CBO)는 현재 예정된 재정건전화 방안이 **내년중 모두 시행될 경우** 재정적자가 5,030억달러 축소되면서 **GDP가 평균적으로 2.9% 감소**(2013년 성장률: -0.3%)할 것으로 추산

▪ IMF에 따르면 재정절벽 현실화로 인한 미국의 성장둔화가 **교역경로를 통해 세계경제로 파급**되며 국별 성장둔화 효과는 대미 수출비중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

○ 시장에서는 민주·공화 양당이 **금년말까지** 재정절벽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방안에 합의**하고 **이전이 큰 이슈는 내년중 타협안 도출**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②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 가능성)** 유로지역 **재정위기 심화 우려**가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잠재되어 있는 가운데 2013년 이후 시행되는 **고강도 재정건전화 추진**이 동 지역 경기회복을 제약할 가능성

○ 현 위기는 유럽통화동맹(EMU) 체제의 **취약점\***과 회원국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 단일통화 도입에 따른 회원국의 환율조정기능 상실과 이로 인한 회원국간 불균형 심화, 역내의 단일통화정책과 회원국별 독립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거시경제정책체제의 문제점, 전염효과에 취약한 구조 및 위기대응체제 미비 등

▪ 위기 해결의 이상적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재정동맹 결성**은 재정주권 양도, 회원국간 재정이전 등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 이 밖에 EMU 체제의 통합 강화 및 안정화 방안\*들도 실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에도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

\* 은행동맹(banking union) 추진, 유로본드 발행, 유럽채무상환협약 체결, EFSF/ESM 역할 강화, ECB의 금융안정기능 확대 등

③ (국내 경제의 고용창출능력 저하)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활동을 통해 유발되는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능력은 저하된 것으로 평가

- 공공부문을 제외한 취업자 변동률의 성장률 대비 비율(고용탄성치)이 2008~11년중 0.32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0.38)을 하회

	2000~07년	2008~11년
▶ 민간부문 고용탄성치 <sup>1)2)</sup>	0.38	0.32

주: 1) 공공행정·국방 제외 취업자수 증감률/경제성장률  
2) 성장률 또는 취업자수가 하락·감소한 2003년 및 2009년은 제외

- 생산액 단위당 취업유발인원도 2005년 16.3명에서 2010년 12.9명으로 하락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취업유발계수 <sup>1)</sup> (명/10억원)	16.3	15.9	15.3	14.0	13.8	12.9

주: 1) 산출액 10억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인원

④ (기업의 투자활력 약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의욕이 약화

- 설비투자 증가율이 2000~07년중 연평균 7.1%에서 2008~11년중 4.6%로 낮아지고 금년 들어서는 3/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0.6% 감소

	1990~99년	2000~07년	2008~11년	2012 <sup>1)</sup> 년
▶ 설비투자 증가율(연평균, %)	7.7	7.1	4.6	-0.6

주: 1) 1/4~3/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 제조업 설비투자의 IT산업 비중이 절반 수준에 달하면서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상존

	1990~99년	2000~07년	2008~11년	2012 <sup>2)</sup> 년
▶ 설비투자내 IT산업 비중 <sup>1)</sup> (연평균, %)	26.9	47.3	45.7	51.5

주: 1) 제조업 기준 2) 전망치 기준  
자료: 정책금융공사

### Ⅲ

## 지속성장을 위한 제언

- ◆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유로지역 재정 위기 장기화, 미국 fiscal cliff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운데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
  - **FTA 체결 확대**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경제 각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
    - 금융산업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정책** 등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의 금융복지(financial well-being)를 도모
  -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 외자유출입 완충장치 마련**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 제고**에도 노력

Ⅰ (FTA)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확대를 주요 **성장전략**의 하나로 지속 추진할 필요

- FTA는 **교역규모 확대, 외국인투자 유입 활성화, 경제의 효율성 증대, 소비자 편익 증진**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
  - 한·미 FTA, 한·EU FTA 등 기존 FTA들이 발효된 이후 교역이 늘고 외국인투자 유치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한·미, 한·EU FTA 발효 이후 수출 실적

(전년동기대비, %)

한·미 FTA (2012.3.15일 발효)			한·EU FTA (2011.7.1일 발효)		
對세계	對미	FTA 수혜품목	對세계	對EU	FTA 수혜품목
-3.9	4.2	13.9	5.1	-11.1	14.2

주: 한·미FTA의 경우 2012.3.15.~9.14, 한·EU FTA의 경우 2011.7.1.~2012.8.31중 실적  
자료: 지식경제부, 무역협회

-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강화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 국내 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보호와 간섭을 줄이고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지향
  - 경제체질 변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구조조정 비용 등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

② **(금융포용)**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로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대\***

\* 2009년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개시. 2010.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을 설립하고 금융소외 계층 포용 액션플랜을 마련한 바 있음

- **금융포용**이란 경제적 약자층에 **수용가능한 가격**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서민우대금융\***을 **공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주도하에 실시되고 있는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등

- 한국은행도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1.5조원 증액**(7.5 → 9.0조원, 2012.9.13일) 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기회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 금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금융개혁과 함께** 금융포용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 경기부진 완화** 등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경제위기와 투트랙 접근의 중요성

윤창현(한국금융연구원장)

## 1. 서론

- 현재 세계 경제는 위기 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는 있으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남유럽 상황은 아직도 그다지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도 아직 본격적 회복이 되기 힘든 상황임.
- 일본경제도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재정적자와 부채규모가 엄청난 수준에 달하면서 위기가능성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 세계경제의 축소판 내지는 요약판으로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그대로 추종하는 모습을 가진 우리 경제도 이에 따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로 인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모습임.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두되는 경제민주화의 화두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만으로는 위기극복을 하기 부족한 상황임.
  - 어려운 상황 하에서 경제민주화와 함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경제 정상화’의 화두를 중시하는 ‘투 트랙 접근’을 해야 할 상황임.

## 2. 위기의 가능성 : 현황과 전망

- 메릴린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의 투자적합도는 아시아 11개국중 10위로서 일본(11위)의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금융산업이 위기의 진원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산업자체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상당 부분 훼손된 상황임.
-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화두중 하나가 금산분리의 원칙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엄청난 규제가 가해지고 자기자본요건 등 매우 까다로운 요건이 부과되면서 금융산업자체의 투자매력도가 완전히 줄어들어버린 상황임.

-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진입할 유인자체가 고갈되어 버린 것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금산분리의 화두는 내놓을 필요조차 없는 상황임

□ 유럽위기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이는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문제와 구제 금융 문제는 아직도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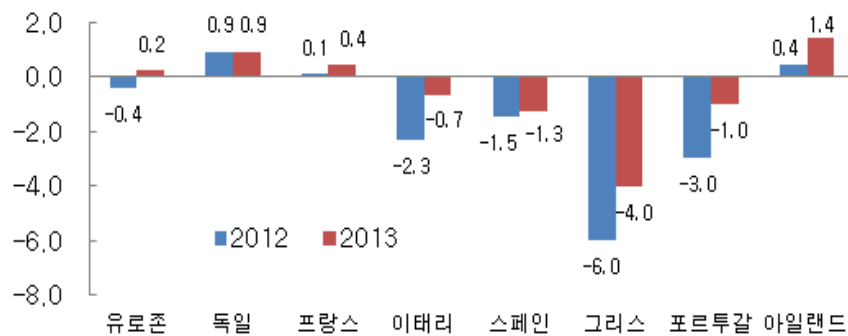
□ IMF의 2012년 세계경제관련 전망치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 나빠지고 있음

< IMF의 2012년 경제 전망치 >

	4월 전망	7월 전망	10월 전망
<b>세계</b>	3.5	3.5	3.3
<b>선진국</b>	1.4	1.4	1.3
<b>미국</b>	2.1	2.0	2.2
<b>유로지역</b>	-0.3	-0.3	-0.4
<b>일본</b>	2.0	2.4	2.2
<b>신흥시장국</b>	5.7	5.6	5.3
<b>중국</b>	7.3	8.0	7.8
<b>인도</b>	6.9	6.1	4.9
<b>브라질</b>	3.0	2.5	1.5

□ 남유럽 국가의 2013년 전망치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님.

<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전망치 >



<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

	세계	선진국	신진국			중국
			미국	일본	유로지역	
2009년	-0.6	-3.5	-3.1	-5.5	-4.4	9.2
2010년	5.1	3	2.4	4.5	2	10.4
2011년	3.8	1.6	1.8	-0.8	1.4	9.2
2012년	3.3	1.3	2.2	2.2	-0.4	7.8
2013년	3.6	1.5	2.1	1.2	0.2	8.2

□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경제의 뇌관이며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임.

- 그러나 동시에 이를 터무니없이 과장할 필요는 없으며 있는 그대로 잘 들여다 보아야 함.

□ 약 1700만명의 차주가 922조의 가계신용을 보유하고 있음.

- 소득 순위 상위 40%의 가구가 75%의 빚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 순위 최하위 20%는 전체 부채의 5%를 보유하고 있음.

□ 한편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시나리오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지적되었는 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의 상황과 1998년 외환위기 상황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음.

< 가계부채 시나리오(글로벌 금융위기 / 한국외환위기) >

	시나리오 1 <2009.2월 <sup>2)</sup> >	시나리오 2 <1998.8월 <sup>3)</sup> >
소득 <sup>4)</sup>	-1.8%	-7.3%
금리 <sup>5)</sup>	+0.9%p	+4.4%p
부동산가격 <sup>6)</sup>	-2.1%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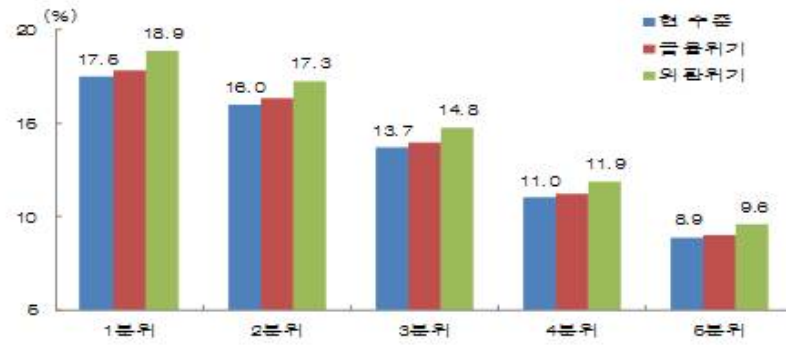
□ 이 경우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부채 상환능력을 점검하였는바 소득중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액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DSR 지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 DSR 지수의 변화는 1분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약 2% POINT 이내의 증가세를 보여서 그 영향이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LTV의 경우도 90%를 넘게되는 위험 가구의 비중이 3%p 내외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어 위험가구의 비중이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다른 시나리오 접근도 제시되었는바 소득을 기준으로 한 DSR 비율이 60%를 넘는 가구의 경우 56.9만가구가 149조원 정도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금융대출이 부동산의 60% +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가구 수는 10만 가구정도이고 이들이 48조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 만일 주택가격이 20% 까지 하락하는 경우 이들 고위험 가구의 숫자는 14.7만 까지 상승하면서 금융권의 손실은 16.6조원정도가 발생함.
- 현재 은행권의 자기자본은 160조원 정도로 파악되므로 일단 손실을 금융권에서 떠안고 BIS 비율이 2-3%p 하락하는 정도에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해당 소득분위별 DSR 중위값 (시나리오1 시나리오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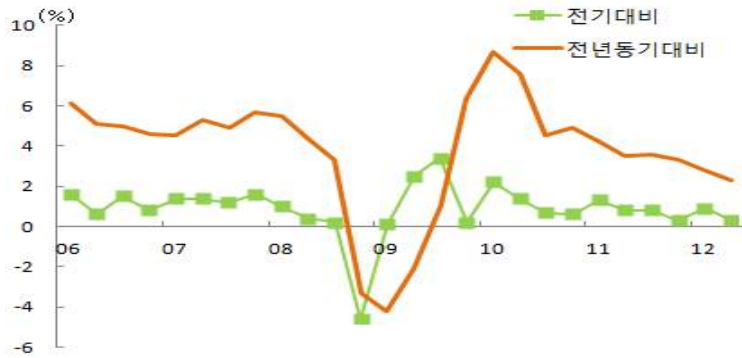


< 자산변화 ( LTV 90% 넘는 가구의 비중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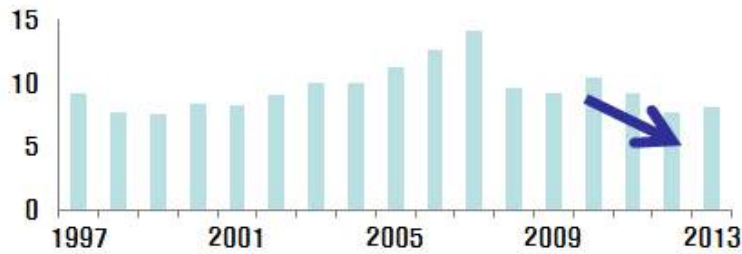


-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009년 0.3% 2010년 6.3%를 기록한 후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바 2013년은 2.8% 정도로서 1012년 대비 소폭증가, 2011년 대비 소폭감소 정도의 상황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세계 경제가 부진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임.
- 중국경제도 8% 대로 하락한 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바 중국경제의 부진함은 한국경제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모습임
- 일본 경제도 1% 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여년이 넘게 부진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임.

< 한국경제 성장추이 >



< 중국경제 성장세 ( 7.8% 에서 8.2% 정도로 ) >



□ 한국경제의 2013년 전망치는 다음과 같은바 큰 위기는 없으나 지속적인 부진함에서 적극적으로 탈피하고 있지는 못함.

< 2013년 전망 요약 >

	2012년			2013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성장률	2.5	1.9	2.2	2.1	3.4	2.8
최종 소비지출 (민 간)	2.0	2.1	2.0	2.4	2.7	2.5
총고정자본형성 (건설) (설비)	0.8 Δ0.6	1.0 0.3	0.9 Δ0.1	2.4 2.6	4.4 1.6	3.5 2.1
총 수출	3.9	2.2	3.0	3.6	9.4	6.5
총 수입	2.4	1.2	1.8	2.8	9.1	6.0
경 상 수 지	137	191	328	119	198	317
상 품 수 지	111	167	278	128	186	314
수 출 (통관)	2,751 (0.5%)	2,690 (Δ4.5%)	5,441 (Δ2.0%)	2,788 (1.3%)	2,858 (6.2%)	5,646 (3.8%)
수 입 (통관)	2,642 (2.3%)	2,523 (Δ5.2%)	5,166 (Δ1.5%)	2,661 (0.7%)	2,672 (5.9%)	5,333 (3.2%)
서비스·소득·이전수지	26.0	24.0	50.0	Δ9.0	12.0	3.0
소비자 물가 상승률	2.7	1.9	2.3	2.5	2.8	2.6
원/달러 환율	1,142.0	1,114.0	1,128.0	1,091.0	1,077.0	1,084.0
국고채 수익률(3년, %)	3.4	2.9	3.2	3.0	3.2	3.1

### 3. 향후 과제

□ 남유럽과 일본은 우리의 반면교사임.

-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수출을 통해 경상수지균형을 달성하지 못한채 지속적인 수지적자를 기록하면서 정부나 민간이 해외자본을 통해 이를 메워오다가 추락해버린 남유럽 국가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교사(反面教師)임.
-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며 제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축통화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됨.
- 그리스의 경우 제조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수출경쟁력이 훼손되면서 지금에 와서 대외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황이므로 다른 국가에서 돈을 빌려오지 못하고 구제금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바 단순한 유동성 부족(illiquidity)이 아니라 부채상환능력 자체가 부족한 채무불이행 위기(insolvency) 상황으로 분석됨.

□ 일본의 경우 IT 기업들의 실적이 심할 정도로 저조한 상황인바 파나소닉은 2년 연속 원화기준 10조원의 적자(7500억엔)를 내고 있고 샤프의 올해 적자규모는 원화로 약 6조원(4500억엔)에 달할 정도임.

- 소니는 작년에 5200억엔(한화 약 7조원)의 적자를 낸 후 올해는 균형수준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아직도 확실치 않은 상황임

□ 이러한 전자업계의 부진은 소위 ‘잘라파고스’ 현상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자판’과 ‘갈라파고스’의 합성어로서 세계경제의 흐름을 발빠르게 읽어내지 못하고 스마트폰 열풍 등에 대응하지 못한 채 뒤쳐져 버린 일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단어임.

- 발빠른 대응과 기업경쟁력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현상인 바 이들의 소유지배구조에는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가 관심있게 추진해야할 과제는 기존순환 출자 해소같은 명분론적 과제도 있지만 실질적 가치가 있는 과제가 중요함.

□ 2013년은 저성장 추이가 지속되면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경제에서조차 긴축만으로는 안되고 성장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에서도 경제민주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임.

- ‘경제 정상화’의 화두는 경제를 정상(正常)궤도에 올리는 동시에 정상(頂上) 수준으로 만든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면에서 감안해야할 화두로 보이며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 민주화가 ‘나눔’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다면 정상화는 ‘키움’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음.
-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기존순환출자 해소가 제외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이며 향후 이러한 문제への 접근은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상화, 명분과 실리, 복지와 성장, 키움과 나눔의 ‘투-트랙 접근’이 중요시 되어야 함.
- 노령화, 양극화, 저성장기조정착, 위기국면지속 등 어려운 과제가 향후 한국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문제를 잘 관리하는 동시에 경제체질을 강화하되 위기에 강한 맷집좋은 체질과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육성 등을 통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제 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홍보해야 할 것임.









# 경제민주화 실천 방향

이만우(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I. 용어상 혼선 가닥잡기

‘경제민주화’라는 꼬끼리를 놓고 눈감고 더듬은 감촉에 대한 촌평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원산지로 알려진 독일에서도 이미 사라진 퇴물이라는 주장도 등장하고 반대 성명과 시위까지 벌어지는 혼선의 와중에서도 대통령 선거일은 다가오고 있다. 경제민주화 헌법 조항을 자신이 제안했다며 논란의 불을 지핀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주말에도 강연장을 돌며 경제민주화의 요체는 “경제세력을 국민 감시 하에 두는 것”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경제민주화의 요체가 국민감시라면 야권 후보 정책자문그룹 주류인 시민단체 출신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선구자이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는 뜻이다. 대표적 시민운동가인 안철수 캠프 국민정책본부장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정리하기도 부족한 초보라고 악평했는데 그의 평가자로서의 권위를 김종인 위원장이 강화시켜 준 셈이다. 감시자만 득실거리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조리돌림 당하는 세상이 되면 일자리는 누가 만들고 청년들은 어디서 희망을 찾고 국민은 무엇을 먹고 살지 정말 걱정이다.

‘경제의 민주화’라는 용어는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처음 도입됐다. 헌법 119조는 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방향을 정하고 2항에서 ‘①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②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③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내용을 뜯어보면 지금까지 운용된 경제정책을 망라하고 있어 25년이나 흐른 현재의 시점에서 대선판을 흔드는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의아하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혼선은 김종인 위원장이 순환출자와 금산분리 등 대기업 규제를 핵심으로 물고 감으로써 촉발됐다. 대기업 규제로 편향된 경제민주화를 놓고 반대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는 여권의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대비되는 야권 분위기는 4자성어로 표정관리(表情管理)다. 대기업 규제 공약을 대거 동원했다가 재미가 적었던 지난 4월 총선에서의 쓰라림을 새누리당이 자진해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차도살인(借刀殺人)의 횡재를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성공하면 원조임을 내세워 공을 챙기고 실패하면 더욱 가혹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안성맞춤이 된 것이다.

경제민주화 그 자체보다는 과도한 대기업 엮어매기가 혼란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중재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명확하게 공약을 설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 II. 순환출자 논란의 정리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구조조정 정책 중에는 성공사례도 있고 실패사례도 있다. 확실한 성공 사례는 무책임과 부실의 대명사였던 기아차를 현대차그룹이 인수해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초우량 기업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공적자금을 줄기차게 퍼부으면서 규제와 감독을 집중시키지만 부실이 계속되는 저축은행 사태가 대표적 실패사례다. 이들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 차이는 주도 세력이 민간과 정부로 갈린다는 점이다. 정부주도의 실패 사례 현장에는 정치권의 검은 손이 끼어들기 마련이다. 저축은행 비리 관련자들의 면면을 뜯어보면 경제를 망치고 있는 세력의 진면목을 금방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부채비율 감축정책의 성과는 복잡적이다. 부채를 많이 짊어질 경우 불황이 닥치면 이자부담을 견지지 못해 도산할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나 활황 시에는 이자율 보다 높은 수익을 얻게 되면 주주에 귀속될 이익이 대폭 증가된다. 불황이 닥쳐 기업도산이 이어지면 높은 부채비율은 부실의 주범으로 비난 받는다. 외환위기 수습방안의 하나로 김대중 정부가 내세운 부채감축정책은 ‘부채비율 200%’를 목표로 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부채를 그대로 두고도 자본을 늘리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원래 보유현금이 부족했던 기업주 대신 계열사들이 돌아가면서 증자에 참여해 부채비율 목표를 맞췄고 정부는 알면서도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해 이런 꼼수를 도왔다. 무리하게 부채비율 감축을 몰아붙이면 유일한 해결책은 순환출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만우, 조선일보 1999년 7월 5일자 칼럼 ‘부채비율 200%’의 부작용).

순환출자 묘수는 금융공기업 구조조정에서도 벤치마킹됐었다. 산업은행 BIS비율 맞추기에 한국전력 및 담배인삼공사 등 정부가 보유했던 공기업 주식이 현물출자 됐다가 임무완수 후에 투신사로 재출자돼 또다시 자본비율 맞추기를 수행했다. 순환출자 방식의 편법적 비상조치는 위태로웠던 금융시장 안정화에 결정적 도움이 됐다. 기아자동차의 경우도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출자금 분담을 통한 인수로 살아났고 정상화돼 수익을 얻은 후에는 계열사 신규출자에 동참함으로써 그룹 전반의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순환출자에 대한 오해는 기업주가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순환출자 결과 기업주의 주식 보유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에 배당이나 주가상승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비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1% 실질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면 이익이 생겨도 1%만 차지하고 99%는 경영을 위임한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것이다. 순환출자 논란의 주된 타깃인 삼성과 현대차그룹에 장기적으로 투자한 주주들은 대박을 터뜨려 만족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문제를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를 강제한다면 가장 단순한 해결방안은 고리의 마지막 계열사 보유주식을 발행회사가 자사주로 매입하는 것이다. 에버랜드의 경우 삼성카드가 보유한 주식을,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미포조선이 보유한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하면 끝난다. 현대차도 여러 갈래 순환출자의 마지막 고리를 발행회사가 자사주 매입으로 해소하면 된다. 순환출자 정리를 위해 자금

력을 동원하면 가용재원 고갈로 투자여력이 줄어들고 신규고용도 위축된다. 자금 부족으로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기업집단은 일부 주식을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데 민영화가 시급한 우리금융, 대우조선 및 금융공기업의 매수세도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매물부담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심각할 수밖에 없다.

순환출자가 문어발 경영을 유발해 기업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주장은 작금의 기업현실을 간과한 구식 논리다. 우선 ‘문어발’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지 않으며 우리 대기업과 비교해 전문화로 칭송받던 노키아, 소니, 닌텐도, 휴렛팩커드, 인텔, 코닥 등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있는 근래의 상황을 깊이 새겨야 한다. 경기변화에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업종 포트폴리오 배합의 장점이 오히려 부각되는 시점이다. 문어발 경영을 비난하면서 전문화를 통해 높이 날겠다면 ‘스카이 콩콩’ 스타일로 바꾼 기업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위험이 있다.

기업이 망하면 기업주가 가장 큰 손실을 입는다. 기업주가 탐욕 때문에 수익성도 따지지 않고 기업 규모를 무작정 확대할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무리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우둔한 일이다. 협력기업과의 이익 나누기에서는 탐욕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업의 심사숙고한 투자결정 조차도 탐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

실패한 기업주는 다시 일어서기가 극히 어렵지만 규제정책 내놓았다가 실패한 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시스템은 먹통이다. 회계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코미디 같은 규제는 ‘결합재무제표’였다. 다른 나라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적 재무제표가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 무기로 도입됐다. “결합재무제표를 강제화하면 재벌이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는 웃기는 주장도 등장했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상대로 결합재무제표를 설명하기도 했다. 결합재무제표는 ‘대기업 괴롭히기’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기업 개혁’의 수단으로 활용할 바가 없는 것이다(이만우, 한국경제 2000년 12월 11일자 다산칼럼, 결합재무제표 꼭 필요한다).

아무런 활용도 없이 12년 동안이나 많은 대기업 그룹을 괴롭혔던 결합재무제표는 금년에 와서 외감법 개정으로 사라지게 됐다. 결합재무제표를 한 번이라도 접촉한 경험이 있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지 알 수 없는 허망한 규제폭력으로 유발된 엄청난 비용 낭비에 대해 책임지는 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 III.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민주화

“일자리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그렇다면 일자리 망치는 일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지 말아야 한다. 경제민주화 이름을 내건 규제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엄밀히 따져야 한다. 감시를 하던지 규제를 하던지 대상 기업이 망하지 않고 살아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경제민주화의 전제조건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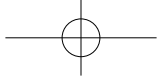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은 동반성장이나 상생협력 같은 대기업과의 하청구조를 상정한 이익 나누기뿐만 아니라 독자적 영업영역을 보유한 사업의 성장에도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내수용 상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대책과 독자 수출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복지 차원에서의 작업장 개선사업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투입해야 한다. 각종의 인허가 업무와 세금관련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지원센터를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해 운영해야 한다.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 역량을 확보한 기업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심이 되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이끄는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상무부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이 통합된 중소기업 해외 무역 지원 총괄기구가 오바마 2기 정부에서 출범할 예정인데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해 강력한 지원기구를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

청년이 제때 적절한 직장을 잡을 수 있어야 적령기에 혼인과 출산이 가능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를 막을 수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동이 자동화 기계의 생산성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조세제도의 변혁이 강구돼야 한다.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생애 첫 직장을 얻은 청년에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획기적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정치권은 공허한 지배구조 논쟁을 접고 청년 일자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구조 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 법인세를 더 걷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생애 첫 직장에 한해서 고용한 기업에 대해 급여의 상당부분을 법인세 감면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청년들도 말로 만리장성을 쌓는 토크쇼 세력에 현혹되지 말고 일자리 만들기 사력을 다하는 기업가의 공헌을 인정해야 한다. 기업가들도 자신의 이익보다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에 열정을 모아야 한다. 기업주별로 고용실적을 집계해 이를 가장 중요한 국가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인정해 드높이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공정한 경제 질서 아래서 기업가의 열정이 집결되고 청년이 보람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나라가 경제민주화의 목표일 것이다.



# 『기로에 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 - 경제위기, 일자리 · 성장, 경제민주화의 해법 -

### ❖ 토 론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 [ 학 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MPH)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예방의학 전문의  
 고신의과대학 의학과 의학사(MD)

#### [ 경 력 ]

(현)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  
 국무총리실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소속 육아정책개발센터 이사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국장 (부이사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 사회정책비서실 행정관 (별정직 3급)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 · 문화 · 여성분과 전문위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정책전문위원 (국회2급)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외래 교수





#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의 역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 □ 발제문에 대한 검토 의견

### ○ 역지 사지와 중용이 필요

- 한국 경제의 상황 :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저성장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저성장시대에 맞는 국민육구의 조절 필요
- 지속가능한 분배와 복지를 위해서도 경제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 진영에 대한 비판
-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건설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진보진영에 대해서도 비판

### ○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

문제점	대응 방향
개방소국 경제의 변동성 확대	건설한 거시 안정화 정책
경제의 노쇠화 현상	R&D와 혁신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
경제사회의 양극화	공정사회와 동반성장
중국의 G2화와 북한 변수	스마트 파워 지향

### ○ 경제성장과 고용의 연계 방안

-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도 4% 수준의 적정 성장이 필요하며, 고용과 연계된 성장으로 전환해야 함
- 1) 기업이 주도하는 고용 친화형 성장 강화 : R&D투자 확대, 규제 완화, 보육지원,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 2) 기업주도 성장을 보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투입형 일자리 확대
- 3)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정규직과의 격차 완화(2/3 정도의 임금 수준)
- 4) 40시간 노동 준수에 12시간 연장 근무로 일자리 나누기 추진
- 5) 정규직 노동의 경직성 완화

### ○ 경제성장과 분배 복지

- 선별적 복지로 효과적으로 분배의 문제 개선
  - 노블리스 오블리제로의 강화로 재해에 대비
  - 목인입흡의 정신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시혜적인 분배로 흉년 해결
  - 소득 재분배 정책 보다는 빈곤 퇴치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

- 심각한 소득 분배의 불균형에 대한 fact를 인정하되 개선 방법은 선별적 복지로 추진
  -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지금은 크게 나쁜 상태가 아님
  - (세계화, 기술진보, 1인 가구와 여성 가장 가구의 증가 등으로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인들 때문에)재분배 정책을 하여도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
- 낮은 사회복지 지출의 문제 동의하며 복지 확대는 필요함. 다만 지속가능성과 재정 여력 내에서 시행해야 함
  - 저출산을 고려한 복지 확대
  - 고령화를 고려한 복지 확대
  - 북한 주민까지 고려하는 복지 확대

○ 양극화와 경제민주화

- 산업화 초기의 수출 중심,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인한 복지 소외 양극화 심화는 인정
  - 수출과 내수의 동시 중시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 인정
-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긍정하면서 자유시장경제의 폐해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여 시장경제의 장점을 잘 살리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
- 기득권층과 보수진영이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증세와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관대해지도록 이끄는 것이 새 시대의 리더십으로 **“보편복지는 실현가능하지 않은 나쁜 정책이라는 것을 국민에 설득”**

○ 발제문에 대한 검토 의견 및 바람직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

- 발제문은 기존의 보수진영의 논리를 넘어 합리적으로 논리가 전개 되었음
- 그러나, 경제학계와 지성인들의 역할을 공정한 관찰자'로서 사회적 약자에 공감하고 상생 화합하는 것으로 한정할 경우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복지 부분에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한계성에 봉착할 것임
-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OECD 선진국들의 경험을 볼 때 지속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인 선별적 복지 보다는 추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취약계층에 한정된 복지가 아니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대상이 되는 복지가 세수 증가나 소득 재분배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 더 효과적임
  -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보장,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통해 침체된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고 혁신 주도형의 경제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 방안으로 단순히 복지 예산의 증액이나 복지 대상의 확대를 넘어, 복지국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황<sup>1)</sup>

○ GDP 대비 복지지출의 수준

**국민소득 1만불과 2만불 시대의 복지 비용 비교**

	1만불 시대 (x)		2만불 시대 (x)	
	달성년도	사회복지지출	달성년도	사회복지지출
미국	1978	13.7	1988	14.1
일본	1981	10.4	1987	11.3
스웨덴	1977	27.8	1988	32.2
영국	1987	18.3	1996	22.8
독일	1979	25.7	1990	29.6
프랑스	1979	23.5	1990	30.1
호주	1980	11.7	1996	15.7
평균		18.7		22.3
<b>한국</b>	<b>1995/2002</b>	<b>5.3/NA</b>	<b>2007</b>	<b>5.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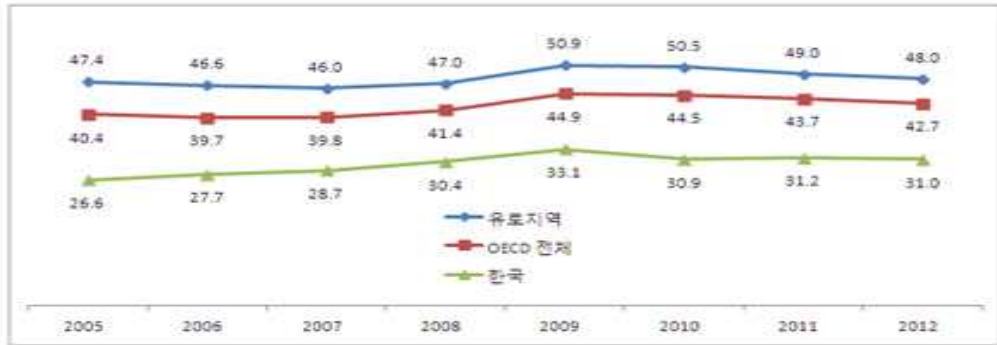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주택 부문 지출(18.0조원)을 포함하여 연간 86.4조원(2011년)을 지출하므로 GDP 대비 7.68%라고 주장, 이는 정부 재정의 27.9% 수준임

[그림 1] 경제 수준별 GDP 대비 복지지출 비교

-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통합재정상의 복지지출 규모로는 2012년 약 92조 (중앙정부총지출 대비 28.2%, GDP 대비 6.7%), OECD SOCX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2조원 (GDP 대비 약 9%)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OECD 통계에는 산정되지 않는 각종 주택 건설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특히, 이 수준은 동일 GDP 규모일 때의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30%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음.
- 이는 근본적으로 GDP대비 국가의 재정 규모가 너무 적은 것이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이며, 국가 재정 중에서도 복지재정의 비중이 낮은 것이 문제임.

1) 이하의 글은 한국정책컨벤션(11/7)에서도 일부 인용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대안을 모색하는 대안모델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발표될 자료의 일부임

## GDP 대비 국가 재정 규모의 비교



출처: OECD(2011), Economic Outlook no.89 (May).

41

[그림 2] GDP 대비 국가의 재정 규모 비교, 2010. 이상구

- 정부의 총 지출에서 복지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OECD 나라의 50% 수준에 불과하여 어떤 측면에서 보아도 복지 재정의 규모는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음

### 주요국의 정부 총지출 대비 분야별 공공 SOCX 비중 (2007년, 자료 OECD data, P&C 리포트에서 재인용)

구분	한국	프랑스	스웨덴	영국	일본	미국	멕시코
전 체	<b>26.3</b>	54.3	53.6	44.3	51.7	45.8	37.3
① 노인	<b>5.6</b>	21.1	17.6	12.9	24.3	14.5	5.9
② 유가족	<b>0.9</b>	3.3	1.1	0.3	3.6	1.9	1.3
③ 비능력 관련	<b>1.9</b>	3.4	9.9	5.4	2.2	3.6	0.3
④ 의료	<b>12.2</b>	14.3	12.9	15.2	17.4	19.8	13.7
⑤ 가족	<b>1.6</b>	5.7	6.6	7.2	2.2	1.8	5.2
⑥ 노동시장	<b>0.5</b>	1.7	2.2	0.7	0.5	0.3	0.1
⑦ 실업	<b>0.9</b>	2.6	1.3	0.5	0.9	0.9	...
⑧ 주택	...	1.4	0.9	3.2	...	...	6.5
⑨ 기타	<b>2.7</b>	0.7	1.2	0.4	0.7	1.5	4.4

42

[표 1] 주요국의 정부 총지출 대비 사회복지분야의 지출 비교, 2011. P&G 리포트

-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연금과 건강보험의 자연 지출 증가 등으로 앞으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현 시스템을 유지한 채 수동적으로 증가를 기다리지 말고, 선도적인 국가의 복지 투자를 통해 복지 지출을 효율화 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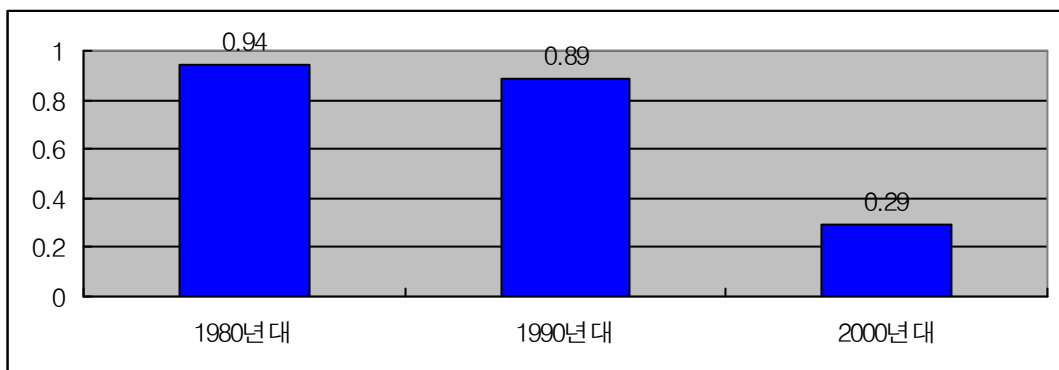
#### ○ 한국 경제체계의 구조적 한계

-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경제성장 중심주의와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는 한계에

이르고 있음.

- 적어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0년부터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기업의 한계투자성향<sup>2)</sup>이 0.9 이상으로 나타나,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였음.
- 그러나, 2000대 이후로는 더 이상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이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고용을 창출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이미 지속 가능성이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그림 3] 기업들의 시기별 한계투자성향



(출처) : 한국은행 자료 재가공.

- 한국이 IMF를 통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제도를 정착시킨 2000년대에 들어와 기업의 한계투자성향이 0.3 수준으로 떨어져 정부의 기업조세 지원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복지지출 정책의 경제적 효과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홍헌호, 2011).
- 실제로 한국의 경우 최근 10여 년 간 대기업들의 눈부신 성장과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 수출대기업의 고용 총량 자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최근 유럽에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중심의 경제체제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부자 증세와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태임.

워런 버핏은 최근 <뉴욕 타임스> 칼럼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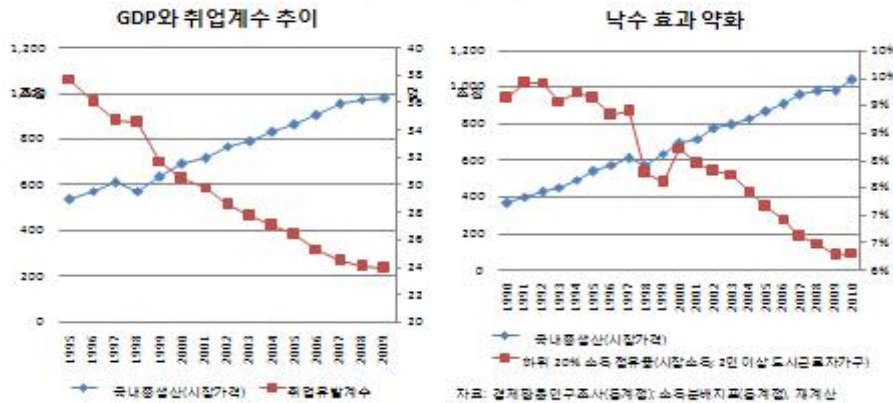
- 부자증세가 이뤄지면 투자가 위축된다는 감세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지난 60년간 투자를 해 왔지만 자본소득세가 39.9%에 달했던 1976~77년에도 세금이 무서워 투자를 꺼렸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비판
- 또한 부자증세가 이뤄지면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감세론자들 주장에 대해 “세율이

2) 한계투자성향(marginal propensity to invest)은 기업의 소득이 1단위 늘었을 때, 투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한계투자성향 = 투자의 증가분/ 소득의 증가분)

높았던 1980~2000년에 4,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지만 세율이 낮아진 2000년대 이후 일자리는 많이 늘지 않았다”고 지적.

- 감세론자들이 부자들에게 감세해 주면 이들이 소비를 해서 나머지 서민들에게 돈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10년간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비판

## 성장과 분배의 단절



- 199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고용증가율이 담보하는 전형적인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결과적으로 낙수효과는 점차 약화되어 가는 추세

[그림 4] 성장과 분배의 단절,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구조에 관한 연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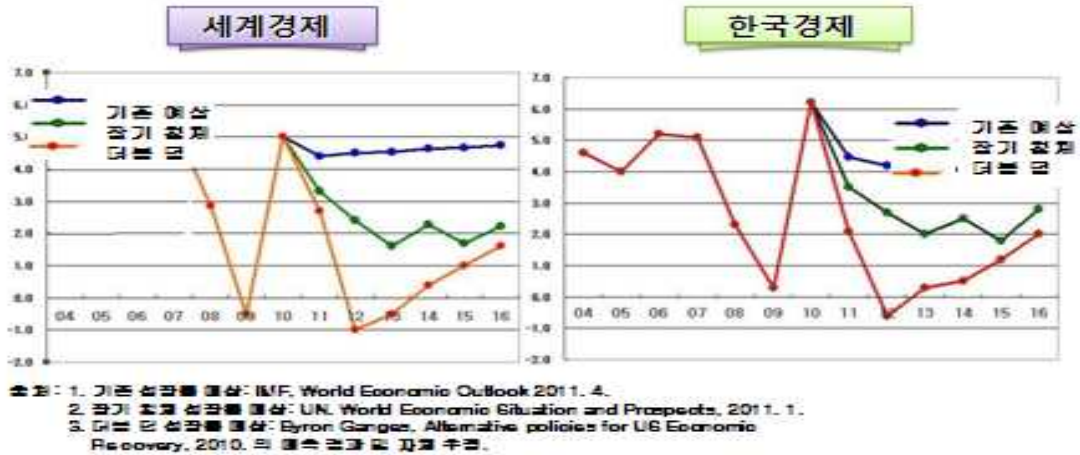
○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래와 같이 열거될 수 있음

- 1) 과도한 수출 의존과 지나치게 적은 내수 부분의 불균형,
- 2) 심각한 양극화로 인한 부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내수 시장의 위축,
- 3)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공정 관계로 인한 지속적인 혁신과 연구개발의 부재,
- 4)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 숙련 고급 노동인력의 공급 부족,
- 5) 과도한 시장화와 금융화 등으로 인해 시장의 합리적 재배분 기능 위축
- 6) 급속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저조한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 등 비효율적인 사회체제로 인한 생산 연령 인구 중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공급의 한계 등이 손꼽히고 있음

- 이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 주도의 적극적 시장 개입과 조세 정책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시행이 유일한 해결책임.

## 시나리오 별 세계/한국 성장률 전망

유로존 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충격은 2008년 위기를 능가할 것임.



[그림 5] 유로존 위기의 원인, 전개과정, 그리고 한겨경제에 미치는 파장, 유승경.

- 특히,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해 기존의 5대 주력 수출산업 중 조선, 철강, 화학 등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대유럽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출이 저조해지면서, 대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영향을 받으면서 낮은 경제 성장율이 지속되는 등 기존의 경제정책은 지속되기 불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됨.
- 전체 국가 GDP의 75%를 차지하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경제로는 한계에 도달하였고 내수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균형적인 성장이 요구되고 있음

### ○ 복지 지출과 경제 성장

-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및 재정을 활용한 위축 부분의 부양 및 활성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조정시장 경제 체제 등 복지국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경제 성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소득보장과 노인 돌봄, 일자리 보장 등의 보편적 복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은 크게 다음과 같은 영역이 될 것임
  - 1) 미흡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면서 생기는 해당 부분에서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2)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통한 이전 지출과 수혜자인 국민들이 받게 되는 사회적 임금의 효과
  - 3) 그 동안 개인이나 개별 가게에서 지출하던 부분이 공공 지출로 대체되면서, 해당 되는 규모 만큼 늘어날 가처분 소득 및 이로 인해 재래시장, 골목 상권, 자영업, 중소기업 등 서민의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 진작 효과
  - 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및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 등으로 인한 1차 분배(임금)의 증가와 보편적 복지로 인한 2차 분배 증가가 상승작용을 하면서 부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5) 보편적 복지에 투입될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하는 중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전체적으로 대

기업에서 중소기업들로 재분배가 이루어지며, 동시에 수출 부분에서 내수 부분으로 재분배, 고소득자에서 중상층과 저소득자들로 부의 재 배분, 그리고 중상층과 저소득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구매력 증가 등의 도미노를 기대할 수 있음

- ※ 한국과 같이 산업화된 나라에서 전 국민적인 규모로 현금 지원을 통한 기본소득보장 정책이 도입된 사례도 거의 없고, 높은 가계 부채 비율 때문에 현금성 급여의 경우 (이자 지출과 원금 상환 등으로) 금융권에 대한 부의 집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복지 정책의 방향

○ 국민들이 경험한 복지확대 정책의 성과 및 기대 효과

- 이미 무상급식 정책이나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국민들은 복지국가의 혜택을 받아본 경험이 있음.

### 2012. 3월. 정부정책을 통한 물가하락 효과 (전월비,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2012. 4)

품목	가중치	하락율(%)	물가효과(%p)
계			△0.48
▪ 보육시설이용료	10.0	△33.9	△0.33
▪ 유치원 납입금	6.9	△11.1	△0.07
▪ 학교 급식비*	9.7	△14.5	△0.08

\*12.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2.6% 상승(전월 대비 △0.1%)  
 하여 지난달(3.1%, 지난해 4분기 평균 4.7%) 보다 상승률 둔화  
 \* 초등학교 4학년 까지의 무상급식의 시행효과는 11. 3. 0.3%p기 반영,  
 이번의 성과는 5,6학년 확대 시행의 효과

[표 2] 보편적 복지정책을 통한 물가 인하 효과

- 기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는 예산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여도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범위는 한정적임, 특히 복지 지출의 효율화와 효과성 제고는 심각한 문제임
- 바람직한 복지 지출의 방향은 중산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고, 지출 방식도 취약계층의 생계 보장이 아니라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보장 등의 국민들의 생활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임
- 복지국가 정책이 시행되면, 기존의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평균 157.2만원 정도(최대 월 214.6만원)의 이전 지출에 의한 고정 지출 절감 효과 있고, 이에 해당되는 금액 만큼의 가처분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지출액  
(2012. 1/4분기)**

항 목	월 평균 부담액수
자녀 교육비	39.8만원(사교육비 19.5만원)
부모님 생활비	25.3만원
노후 보장(연금 등)	23.6만원
주택 비용	40.6만원
의료 (민간보험 포함)	27.9만원
<b>총 액</b>	<b>157.2만원</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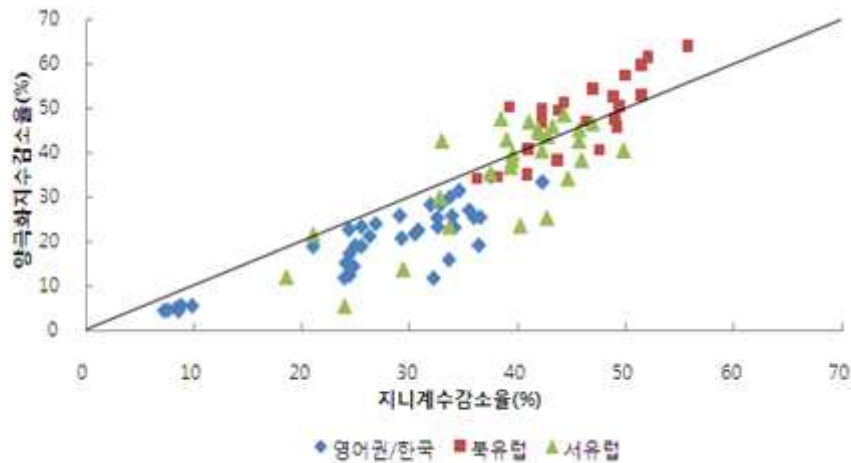
● 도시근로자 가구 월 총소득 442만원, 소비 지출 261.6만원 중 교통통신비를 포함할 경우 고정지출은 214.6만원으로 가계지출의 61% 소비 지출의 82% 수준

[표 3] 복지국가 정책 도입시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가계지출액 추계

-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OECD국가들의 사례를 보아도 보편적 복지 방식의 복지 지출 증가는 소득재분배, 내수 진작, 가치분소득 증가 등의 경로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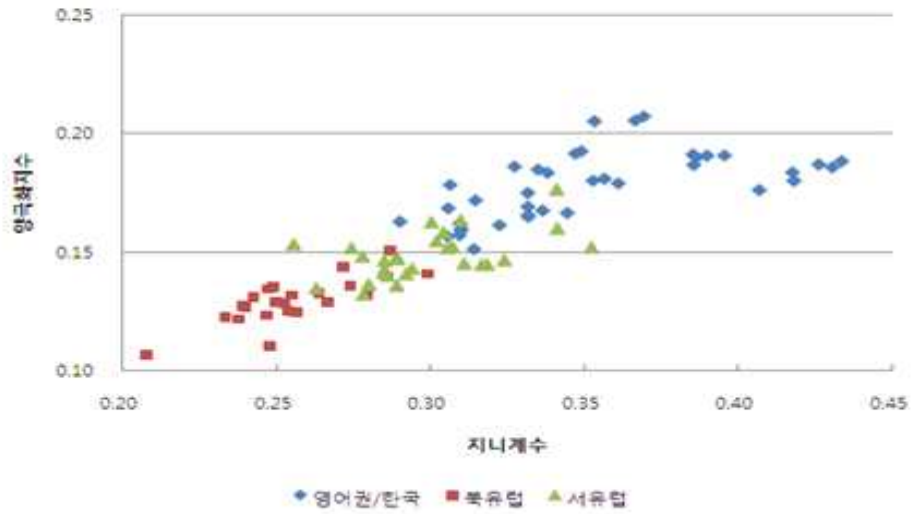
**조세와 공적 이전의 소득재분배효과**



[그림 6] 복지국가들의 조세와 복지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 장지연, 한국노동연구

##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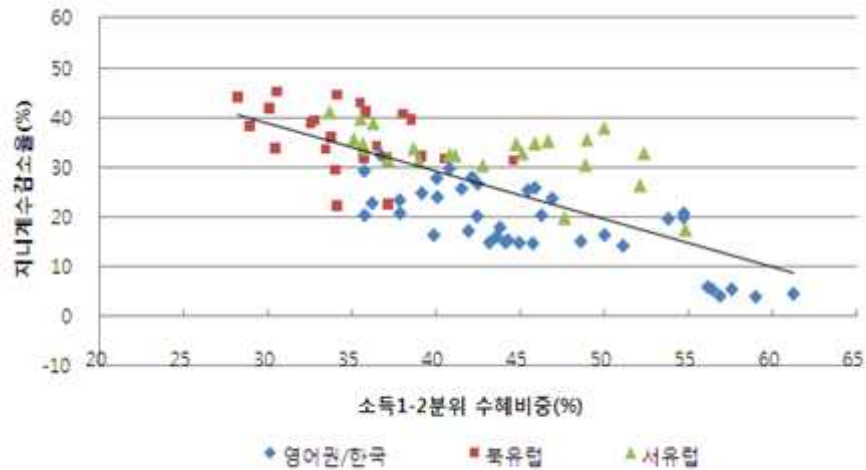
### Gini/양극화지수 (세후경상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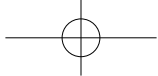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그림 7] 복지국가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1.

##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성과

### 저소득층의 공적 이전 수혜비중과 재분배효과



[그림 8] 복지국가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2.



# 『기로에 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 - 경제위기, 일자리 · 성장, 경제민주화의 해법 -

### ❖ 토 론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 학 력 ]

- 2008년                   충북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학위 취득
- 2006년                   세계경영연구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2001년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 [ 경 력 ]

- 2012.07                홈쇼핑 이사회 의장 및 회장(대표이사) (現)
- 2012.05                kbiz 사회나눔재단 이사장 (現)
- 2011.02                중소기업중앙회 회장(現) - 2회 연임
- 2007.05                (재)중소기업연구원 이사장(現)
- 2007.03                (주)기협기술금융 이사장(現)
- 2006.05                (사)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
- 2004.03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1998.03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3회 연임)
- 1988.04                (주)로만손 대표이사(現)



# 전환기의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대한민국은 경제력 세계15위, '20-50클럽' 세계 일곱 번째 가입 등 지난 50년간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를 통해 정치 민주화를 이루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지난날의 성장과 발전을 위협할 수 있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먼저 유럽재정위기 지속과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둔화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외적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전되며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짊어질 청년고용률은 51.9%에 불과해 언제 절반이하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12.4%)은 OECD(11.1%)보다 크게 상회하여 선진국보다 높은 계층간 소득불평등 문제가 우리 사회를 언제 침예한 갈등구조로 바꿔게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지금 어찌면 '성장과 침체'의 갈림길 앞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오늘 토론주제의 키워드인 "전환기 한국"이란 표현은 매우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찌면 우리 경제와 사회는 이미 이러한 전환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그렇고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동반성장' 노력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반성장은 개별기업의 경쟁력보다 생태계나 기업네트워크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한 경제환경으로 전환되며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과제를 우리는 이미 풀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떤 형태로든 한 번은 풀고 넘어가야 할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시대정신으로 부각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이른바 '경제 3불' 해소를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박근혜 후보도 지난 10월 29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에서 "경제3불 해소가 경제민주화"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6일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상 3대 추진원칙 중 제1원칙을 '서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확실한 기여'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매우 정확한 진단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컨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 납품단가 협상력 제고,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가맹사업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대형 유통

업체의 골목상권 진입규제 등은 대·중소기업간 갈등을 풀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전격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법집행 체계의 개선안은 그동안 제기되어온 ‘숨방망이 처벌’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투자나 신성장 동력 견인을 위한 인수중산업 진출 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순환출자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기회 상실과 골목상권 침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인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 방안은 좀더 확실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 3불 해소에 따른 경제민주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대기업의 성장이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 이상 담보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른바 적하효과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후보께서도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이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소기업 현실을 살펴보면 ‘경제3불’로 인한 ‘경영 악순환’ 그러니까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로부터 출발한 문제가 중소기업의 투자여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중소기업의 성장정체와 경쟁력 약화로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이외에도 중소기업의 미흡한 기초체력도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하면 취약한 R&D 및 글로벌화 문제가 그렇고, 청년창업가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기업생태계의 건강성도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이 이를 말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경제활성화’를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분야의 성공적 추진에는 모두 중소기업이 핵심 주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가 전환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문제를 경제적 약자로서 인식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환경조성을 통해 창의적인 경쟁이 가능토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초체력을 키워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내수중소기업의 수출전환을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너진 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제2창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커다란 자원인 경영 노하우와 일자리를 계승 시켜야 합니다. 과도한

인증 등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규제해소와 제2개성공단 등 새로운 생산거점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효율성 문제를 야기했던 정책의 집행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장관급 중소기업부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환경을 친중소기업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처럼 중소기업이 세상이야기의 중심에 서 본적이 없습니다.

동반성장,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등 모두 중소기업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주제들입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기에 접어들었고, 유럽 재정위기 등 위기의 상시화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환기의 한국경제입니다.

이제 우리경제는 여전히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중소기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을 추구할지를 선택해야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우리 국민의 88%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에 희망을 걸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대통합 등 국민이 요구하는 전환기의 한국경제 과제는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1. 경제민주화는 어법상 맞지 않은 용어임. 경제는 자유화가 옳은 연결임.
  -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결과적 평등을 만들기 위해 시장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이는 보편적 복지라는 정치 슬로건조차 넘어서는 시장의 배분 과정을 왜곡하고 그 결과 생산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 불가피함.
  - 복지는 대체로 시장의 분배 과정을 인정하는 선에서 사후적으로 분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인데 반해 경제민주화는 사전적 개입으로 시장경제 원칙에 의한 분배 과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음.
  
2. 평등의 문제는 롤즈 식의 논법을 따르더라도 차등적 결과를 인정하는 선에서 사후적 조정을 의미하는 것임.
  - 정부 혹은 다른 사회적 지배기구가 사전적 배분절차에 개입하여 정의론적, 결과적 평등을 강제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 외에는 없음. 또 그것은 불가능함. 이론상 전면복지 과잉복지보다 강한 단계임.
  - 롤즈는 결과적 차등을 양해하면서도 차등의 조건으로 최소 수혜자의 지위가 개선될 것을 요구하면서 결과적 평등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그런 면에서 차등은 결과적 평등을 배제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
  
3. 경제민주화는 시장 과정에 대한 불신에 기반하여 정부가 시장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좌편향적 사고임.
  - 시장의 실패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빈부격차와 결과적 평등 자체를 시장의 결함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고의 편린일 뿐임.
  
4.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확대는 경쟁력의 상실이나 생산성이 하락이 초래하는 결과임.
  - 저성장이야말로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경쟁력의 하락이 생산물의 결핍 상태를 만들어 냄. 경제민주화로 상장 체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함.
  - 시장에 개입하는 만큼 생산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큼. 경제민주화가 강력할수록 생산 저해적 요소가 충분. 이는 복지도 마찬가지임. 복지는 생산성과 관련 없는 배분 원칙임. 당연히 비생산적임.
  
5. 경제 민주화는 빈부격차와 불평등성을 재벌 문제로 보고 있음.
  - 재벌을 개혁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양극화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은 어지간한 착각과 오해에 기초한 오류에 불과함.
  
6. 양극화의 책임을 재벌로의 집중이라고 보는 것은 삼성전자 현대차가 불러온 착각임.
  - 최근 10년간 30대 재벌에서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하면 오히려 전체 매출이 줄었음. 어떤 대기업 집단에서건 경제력 지배가 심화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 흔히 GDP비중을 쓰지만 이는 비교 대상이 아님.
  - GDP대비로는 중소기업의 비중도 크게 늘었음.  
(9988이라는 말 자체가 중소기업 비중이 늘었다는 것을 드러냄.)

7. 이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슬한 반증 통계들이 말하는 대로임.  
- 잘못된 통계에 기반한 어처구니없는 반시장 캠페인이 경제민주화임.
8. 경제민주화는 따라서 시장경제와 병립할 수 없음. 원칙에 맞지 않음.
9. 경제민주화는 성장 체제와 병립할 수 없음. 시장의 생산에 개입하는 것임.
10. 경제민주화 법제를 전면 백지화하는 중대결단이 필요함

<악법의 목록>

1. 국민연금 등 의결권 행사:

- 기업 자율성 해체. 연금 사회주의 초래. 스웨덴도 안했던 것임.
- 기업 산업을 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발상
- 의결권 행사할 전문가가 구조적으로 불가능

2. 업무상 배임 중벌

- 업무상 배임죄는 사법의 영역. 독일 외엔 사례 없음
- 사형제 보다 높은 형벌은 언어도단임
- 기업 활동 제약 가능성

3. 하도급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 사적 계약에 개입. 기존 거래선만 보호. 새로운 거래 관계 형성에 애로
- 거래 상대방 탐색 비용 증가.

4. 주주의결권 삭감

- 대주주 역차별. 세계 매매 등에서 지금도 대주주 차별.
- 피리올은 세계의 보편적 현상
- 기업 경영권 보장 제도 시급

5. 순환출자 등 규제

- 기업 구조에 정부가 개입. 규제하는 나라 한국만 유일
- 기업의 자율성 침해. 투자 저해 효과 누적될 것